

문화적 특성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집단과 격자를 중심으로

Exploring Influences of Culture on Income Inequality: Focusing on Group-Grid Approach

저자 (Authors)	주재현, 신현중, 박치성 Jaehyun Joo, Hyeon-Joong Shin, Chisung Park
출처 (Source)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7(3) , 2017.9, 163-193(31 pages)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27(3) , 2017.9, 163-193(3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17111
APA Style	주재현, 신현중, 박치성 (2017). 문화적 특성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7(3), 163-193
이용정보 (Accessed)	중앙대학교 165.***.103.27 2020/07/15 13:3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문화적 특성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집단과 격자를 중심으로*

주재현** (명지대학교)·신현중*** (한남대학교)·박치성**** (중앙대학교)

jhjoo61@mju.ac.kr ; phjshin@gmail.com ; csp7111@gmail.com

본 연구의 목적은 한 사회의 거시적 맥락을 구성하는 문화적 특성이 사회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다. 적극적 의미의 복지 개념인 소득불평등 해소는 한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양식인 문화(문화이론에서 제시하는 집단 및 격자)의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 이론적 논의를 확장시켜, 본 연구는 1)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직접적인가(또는 간접적인가), 그리고 2) 국가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별적 영향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자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양적 분석인 경로분석을, 후자에 대하여는 질적 분석인 필요/충분조건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구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집단 성향이 소득불평등의 감소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직접적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로 나타났다. 반면 격자 성향은 소득불평등을 높이는 영향력(직접적 효과)을 가지지만, 현금이전지출정책에 의해 매개되는 경우, 격자 성향과 복지정책이 상호 상쇄되어 격자가 소득불평등을 높이는 정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즉 집단 성향이 강한 국가에서는 특정한 복지정책이 실시되지 않더라도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반면, 격자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복지정책이 없다면 소득불평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둘째, 문화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복지국가유형별 필요/충분조건 분석 결과 복지국가 유형별로 문화변수와 소득불평등 정도의 관계가 차이를 보였다. 즉 영미형 및 남부유럽형 국가들은 집단 특성이 소득재분배에 대한 충분조건이었고, 북구형 및 유럽대륙형 국가들은 집단 특성이 소득재분배에 대한 필요조건이었다. 한편, 영미형 국가들은 격자 특성이 소득재분배에 대한 충분조건이었으나, 유럽대륙형·남부유럽형·북구형 국가들은 격자 특성이 소득재분배에 대한 필요조건이었다. 요컨대, 소득재분배에 대한 집단 특성의 설명력은 북구형과 유럽대륙형 국가들에서 특히 높았고, 격자 특성의 설명력은 영미형 국가들에서 매우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문화, 집단/격자, 소득불평등, 현금이전지출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2A01010229).

** 제1저자

*** 교신저자

**** 교신저자

I. 머리말

복지선진국을 지향하는 국가들은 국민들이 소극적 의미로서의 복지인 최소한의 삶의 유지의 개념에서 벗어나 적극적 의미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적극적 의미의 복지개념에서 대표적인 것이 소득불평등 해소이다. 즉,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복지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는 낮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도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특히 거시적 영향요인인 문화적 특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적 연대의 측면에서 소득불평등을 파악할 경우, 한 사회의 소득불평등은 그 사회의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특정한 사회(또는 국가)에서 제기되는 사회문제/위험들(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사회의 구성원 간 사회적 연대가 필수 요인이며, 그 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 성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Rifkin(2011)에 의하면 사회적 연대는 타인에 대한 공감(empathy)으로부터 나타나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공감의 사회적 범위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Bourdieu(1986)에 의하면 사회적 연대성의 필요조건인 사회통합은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다. 즉, 자원 보유량의 차이 등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적 상호작용, 공감능력, 그리고 사회통합의 차이는 사회적 연대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사회적 위험의 해결노력 및 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¹⁾

이렇듯 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그 사회의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문화적 특성만이 소득불평등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소득불평등 격차 해소 및 빈곤층 최소화를 목표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설계·실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복지정책 역시 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소득재분배정책이 실시되기 전의 소득불평등도(시장소득불평등도)가 원래 낮은 경우의 국가도 있는 반면, 다른 국가는 시장소득불평등도는 높지만 소득재분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가처분소득불평등도를 낮추는 경우도 있다. 또는 두 가지 소득불평등도가 모두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 전개는 그 국가의 사회적

1) 사회적 맥락으로서 사회적 연대의 정도에 의해 나타나는 문화는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집단(group)과 격자(grid)라는 측면에서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패턴에 따라 문화의 정향성을 파악하는 Douglas의 집단-격자 문화이론(Douglas, 1982; Douglas & Wildavsky, 1982; Thomson, Ellis & Wildavsky, 1990)을 적용하여 사회적 관계 정향성으로서 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Grid-Group 문화이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2장 1절을 참조하시오.

연대 내지 합의의 수준을 반영하는데(그것이 암묵적이든 또는 명시적이든 간에) 이러한 연대와 합의의 수준에 그 사회 특유의 문화적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복지국가 발전에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질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특정 국가의 문화지표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 기존문헌은 두 가지 연구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초기에는 문화가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Lipset, 1990; Jones, 1993; Leibfried, 1993), 최근에는 문화가 다른 매개변수들(제도 또는 정책도구, 역사적·사회경제적 조건, 행위자의 선호 등)을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Lockhart, 2001; Pfau-Effinger, 2005; van Oorschot, 2007; Schröder, 2013).

사실상 문화는 직·간접적으로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로모형을 이용해서 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도에 문화가 복지국가 유형별(북구형, 유럽대륙형, 영미형, 남부유럽형)²⁾로 다른 패턴의 영향력을 가지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Mahoney 등(2014)이 제시한 중범위 사례분석에 있어 변수 간 맥락적 인과관계를 필요/충분조건으로 파악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준용한다. 이는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경로분석에서 문화가 소득불평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 결과가 복지국가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의 일환이다. 즉, 일반화를 추구하는 경로분석의 결과와는 달리, 이 질적 분석방법은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필요조건으로서 영향이 있는지 또는 충분조건으로서 영향이 있는지를 밝히는 깊이 있는 기술(thick description)을 가능하게 해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도(정확하게는 가구가처분소득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정책을 현금이전정책에만 국한해서 살펴보는데, 그 이유는 복지정책 중 현물급여는 가구소득과 직접적 연관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조세정책 또한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금이전과 비교하면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예를 들어, 2013년 기준으로 27개 OECD국가의 현금이전지출규모가 시장소득지니계수를 평균 0.14 낮추었지만, 조세정책을 통해서는 평균 0.04를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즉, 현금이전지출규모의 기여도가 조세의 기여도보다 3.5배 더 높았다. 또한 조세정책은 국가마다 다르고 조세항목에 따라 소득불평등 격차를 감소시키는 것도 있고 오히려 더 증가시키는 것도 있

2) Esping-Andersen(1990)에서 제시되었던 복지국가의 세 유형(사회민주주의, 보수적-조합주의, 자유주의)에 남부유럽형을 추가하였다(cf. 주재현 외, 2016).

다. 국가별 조세정책의 차이를 숫자화해서 양적 분석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이 정책 효과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분석기간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08년 전후이며, 분석 대상 국가는 19개 국가이다. 본 연구의 초점은 각 국가의 문화적 특성 차이가 각국의 서로 다른 소득불평등도의 원인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이에 더해 문화적 특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비록 그 변화 폭이 작을지라도) 이것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1990년대 초부터 2008년 전후까지의 기간을 약 10년 주기로 문화적 특성을 측정하여 분석한다. 집단-격자 문화이론은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화이론으로 문화적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 연구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II. 이론적 논의

1.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 집단성과 격자성

‘문화’는 대체로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된다. 첫 번째는 문화의 의미를 지식·가치·신념 등의 협의로 이해하는 것이고(Pfau-Effinger, 2005; van Oorschot, 2007), 두 번째는 문화를 특정 사회의 사회관계와 집합적 사고방식을 포함한 광의로 이해하는 것이다(Thompson, Ellis & Wildavsky, 1990; Hofstede, 1991). 집단-격자 문화이론(이하 문화이론)은 후자의 입장에서 문화를 해석하고 있다.

문화이론은 문화적 편향(cultural bias),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 삶의 양식(ways of life) 등의 기본 요소들과 이 요소들 간의 관계를 통해 사회가 어떻게 형성·유지·변화되는지를 분석하고 설명한다.³⁾ 문화적 편향은 사회구성원들의 공유된 가치와 신념을 말하며, 사회적 관계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관계의 패턴을 의미한다. 구성원들의 가치·신념·선호·인식 등을 포함한 문화적 편향은 사회적 관계를 정당화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회적 관계는 문화적 편향의 형성을 규정하며, 이러한 문화적 편향은 다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삶의 양식은 문화적 편향과 사회적 관계의 유기적 조합에 의해 형성되는 상태를 일컫는다. 즉 특정한 문화적 편향과 특정한 사회적

3) Grid-Group 문화이론에 대해서는 Douglas(1982), Douglas & Wildavsky(1982), Thompson et al.(1990), Schwarz & Thompson(1990), 박종민 편(2002) 등을 참조.

관계의 패턴 간에 상호지지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서 하나의 삶의 양식(문화유형)이 성립된다.

문화이론은 사회적 관계를 ‘집단성’(group)과 ‘격자성’(grid)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독창성을 찾을 수 있다. ‘집단성’과 ‘격자성’은 사회가 한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성’은 한 개인이 특정의 사회단위에 일체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는 구성원들이 자신을 한 집단의 일원으로 규정하는 정체감의 정도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변수에 의해 개인의 삶이 그 집단에 흡수되고 집단에 의해 지탱되는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같은 주거지에서 자원과 노동은 물론 오락도 공유하는 가운데, 구성원의 집단에 대한 정체감의 정도가 높을수록 집단 구성원의 개인적 선택은 집단의 결정에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집단성’이 약할수록 개인주의적이고 강할수록 연대주의적(solidaistic)이다. ‘격자성’은 한 개인의 삶이 외적으로 부과된 규제·처방에 의해 제약받을 가능성의 정도를 말한다. 이는 사회적 맥락에서의 규제의 정도로서, 특히 개인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역할 구분(role differentiation)의 제도화된 분류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규제가 클수록 개인 간의 사회적 권위의 차이가 커지며,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영역은 적어진다. 즉 ‘격자성’이 약할수록 사회적인 계층이나 차등이 적고 자율적인 판단의 영역이 커지며, 강할수록 계층이나 차등이 크고 자율적인 판단의 영역이 적어진다(Kahan et al., 2007). 집단과 격자는 현실적으로 중복될 수도 있으나, 논리적으로는 상이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개인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규제가 높다고 해서 그 개인이 반드시 집단에 대한 높은 일체감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두 차원간의 차별성이 드러난다(주재현, 2004: 282).

집단성과 격자성은 개인과 사회의 성향에 따라 그 강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를 집단성의 강·약과 격자성의 강·약으로 구분하여 두 차원을 교차시키면 네 개의 삶의 양식(문화유형: 계층주의, 평등주의, 개인주의, 운명주의)⁴⁾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는 문화유형 분류의 기준이 되는 집단성과 격자성을 계량 분석을 위한 문화 측정의 지표로 활용한다.

한편, 문화이론은 문화가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즉 문화는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 다른 사회와의 접촉, 자연재해 등에 의해 사회구성원들이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경이’(surprises)를 매개로 해서 변화할 수 있다. 또한 한 사회 내에서 특정 문화가 주도할 경

4) 계층주의 문화는 강한 집단성과 강한 격자성, 개인주의 문화는 약한 집단성과 약한 격자성, 평등주의 문화는 강한 집단성과 약한 격자성, 운명주의 문화는 약한 집단성과 강한 격자성으로 구분된다.

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다른 문화가 성장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사회 내 문화의 변동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Thompson et al., 1990).⁵⁾ 본 연구는 문화이론의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집단성과 격자성이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문화와 복지의 연관성

문화와 소득불평등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양적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두 변수 간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문화와 복지정책(또는 수준)에 대한 연구들에서 유추할 수 있으나, 문화와 복지정책의 연관성에 대한 경험 연구도 소수에 불과하며, 여러 문화 요소들 중 특정 요소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현중(2013)은 특정 국가의 강한 개인주의적 특성이 그 국가의 복지 대응성 및 반응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고찰했는데, 복지 대응성이 아닌 반응도에서 개인주의적 문화적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문화와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양적 분석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이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질적 연구 성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해당 사회의 복지가 달라진다는 주장은 20세기 후반 이후 주류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이들의 연구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초기의 경향으로서 문화와 사회복지 두 개념 간의 관계에만 주요 초점을 두었던 반면(예를 들어, Lipset, 1968; Jones, 1993; Leibfried, 1993), 최근의 학문적 경향은 두 개념들 간의 관계뿐 아니라 매개변수를 도입하여 제도·정책 및 사회경제적 상황, 그리고 관련 행위자의 행동동기 등도 고려해서 문화가 복지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정교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예를 들어, Lockhart, 2001; Pfau-Effinger, 2005; van Oorschot, 2007; van Oorschot, Opielka & Pfau-Effinger, 2008; Jo, 2011; Schröder, 201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의 대표적인 연구로서 Lipset(1968; 199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Lipset은 자유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미국과 캐나다 간에 발견되는 복지수준 상의 차이를 문화적 요인인 지배적인 가치관과 종교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Jones(1993)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국가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을 동아시아

5) World Value Survey 결과를 활용해서 집단성과 격자성을 측정한 선행연구들(Grendstad, 1999; 주재현 외, 2016)에 의하면, 1981년부터 2010년경에 이르기까지 연구대상이 되었던 서구의 대다수 국가들에서 문화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일부 국가들(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은 집단성과/또는 격자성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국가에서 상당한 문화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본 연구의 각주 14 참조).

문화권의 특징인 유교와 가족주의라는 가치관에서 찾았으며, Leibfried(1993)는 남부유럽 국가들이 ‘미발달된 복지국가’에 머무는 이유가 남부유럽 국가들의 문화적 특징인 가부장주의라는 가치관과 가톨릭 종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초창기 연구들은 문화변수 외의 다른 변수들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이들 변수들이 문화와 복지 간 관계에서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가치관 등의 문화적 요인 외에도 정부의 특성, 이익집단의 영향, 경제적 상황 등의 좀 더 직접적인 요인들이 존재하며, 문화의 설명력은 거시적이고 배경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비판이 존재한다(조영훈, 2010; Elkins & Simeon, 1979).

한편, 후자에 속한 연구자들은 문화가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문화 외의 다른 요인들도 분석틀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초기 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van Oorschot 등(2008)은 문화체계와 사회구조 및 행위자 행위의 상호작용 속에서 복지정책이 산출된다고 보며, Pfau-Effinger(2008)는 문화변수와 기존 제도(또는 경로)의 복합적인 관계를 이해해야 복지정책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Schröder(2013)는 문화와 복지정책 사이에서 계급연대나 투표제도가 필터링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고, Lockhart(2001)는 문화와 여타 변수들(상황 및 기존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복지정책 채택을 설명하고, 이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이 함의하는 바는 문화가 복지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또한 문화는 다양한 사회제도와 관련된 영향력이 있다는 점, 즉 문화의 복지정책에 대한 간접적 영향 역시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요약하면, 이들 연구들은 문화가 복지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는 문화와 소득불평등 간 인과관계 여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이유는 복지정책의 최종 산물이 소득불평등이기 때문이다.

3. 소득불평등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

본 연구의 양적 분석 부분에서는 집단과 격자라는 문화적 특성들이 소득불평등도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집단과 격자가 다른 요인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찰한다. 소득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계량화시킬 수 있는 거시적 요인들을 분석모형에 포함한다.⁶⁾

1) 문화적 요인

앞에서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문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문화와 복지정책의 관계에 대한 질적 연구 성과를 참조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즉, 집단과 격차라는 특성으로 정의된 문화가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경험적 논의는 거의 전무하지만, 문화와 소득불평등도의 관계는 여러 관련 연구들과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

주재현 외(2016)는 전반적으로 집단 특성이 강한 국가일수록 가처분 가구소득불평등도가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집단 특성이 강한 국가일수록 복지발전이 더 성숙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강한 집단 특성은 사회적 연대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사회구성원 다수가 연대성을 훼손할 위험요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Lockhart, 2001; 주재현, 2004). 사회적 연대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⁷⁾ 특히 빈부의 과도한 격차는 사회의 균열을 야기하거나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물질적 성취를 추구하도록 하여 개인주의적인 사회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 특성이 강한 국가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일차적이고 직접적으로 시장경제 활동의 결과(임금·이윤 등의 수준)에 반영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집단 특성이 강한 국가의 정부는 시장경제의 작동과 그 결과에 개입하여 소득의 평등도를 높이려는 노력(복지정책)을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국가에서 정부는 사회적 연대성을 실현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Kahan et al., 2007). 이와 관련하여, 기존 경험연구들은 재분배정책이 집단 특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변수들과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예를 들어, 신뢰(Alesina & Giuliano, 2013), 사회의 동질성 여부(Bénabou, 2000) 및 이타심(Rueda 2014; Duch & Rueda, 2015) 등).⁸⁾ 따라서 집단 특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복지지출 규모(본 연구에서는 현금 이전지출 규모)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질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요컨대, 한 국가의 높은 집단 성향

6) ‘문화와 복지의 연관성’ 부분에서 거론되었던 매개변수 즉,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 외의 여러 요인들 중 계량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분석모형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경로의존성, 계급연대 및 이익단체의 역할 등은 거시적 차원의 양적 연구에서 변수화해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형에 포함하지 않는다.

7) 빈부 격차, 직업, 이념, 종교, 민족, 인종, 언어, 거주지역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Dodds, 2013: 195-198).

8) 이들 변수들은 상호 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띠고 있는데, 사회적 동질성이 높은 사회/공동체일수록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으며(신현중, 2017), 이타심은 사회적 동질감이 높은 사회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Le Claine & Wittwer, 2012; Rueda, 2014; Duch & Rueda, 2015). 집단은 사회에 대한 일체감 정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단적 성향이 강하면 사회적 동질감이 크고 사회적 신뢰가 높으며 동일 사회 내 구성원에 대한 이타심이 그렇지 않은 사회의 구성원들보다 더 높다.

은 직접적으로 소득불평등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현금 이전지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득불평등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집단 크기와 현금이전지출규모의 관계는 선형이기보다는 비선형일 가능성이 높은데, 비선형관계일 경우 역U자 형태를 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분석 대상 국가들의 집단 크기는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의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국가 유형 < 보수적-조합주의 국가유형 < 사회민주주의 국가유형’ 순이다. 기존 문헌에 의하면 복지국가 성숙도 역시 이 순서를 따른다. 그러나 현금 이전지출 규모는 그 순서가 다른데, 보수적-조합주의 국가들은 가부장적 특성이 반영된 복지정책이 발전되었다. 따라서 현물 급여보다는 현금급여의 비중이 사회민주주의 국가유형에서의 그 비중보다 더 크다. 이에 현금 이전지출 규모는 ‘자유주의 국가유형 < 사회민주주의 국가유형 < 보수적-조합주의 국가유형’ 순이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면 집단의 크기와 현금이전지출규모는 역U자형의 비선형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격자 크기가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격자 개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 먼저 앞서 논의한대로, 격자가 약할수록 사회계층 간 간격이나 차등이 작은 반면, 격자가 강할수록 그 차이가 크다(Kahan et al., 2007). 격자가 강한 국가는 사회적 역할 구분이 명확하며 이 역할구분은 구체적으로 계층제상의 상·하 지위에 따라 수행해야 할 역할 및 그에 따른 보상의 차이로 나타난다(주재현, 2011). 구성원들이 차등적으로 받게 되는 보상에는 위신·권위와 같은 비물질적인 것 뿐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격자의 정도는 직접적으로 소득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격자가 큰 국가들은 사회적 역할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적 가부장적 특성을 띠고 있다. 복지체제와 관련하여 가부장적 제도를 파악하는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논의에 따르면 가부장제를 사적 가부장제와 공적 가부장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격자성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사적 가부장제가 높은 국가(예컨대, 남부유럽 국가)는 부양하는 남성과 이에 의존하는 여성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한다. 여기서는 노동력 재생산의 장으로서의 가족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은 잔여적이며, 전반적인 사회복지지출이 줄어들게 된다(홍승아, 1998). 반면 사적 가부장제가 복지국가적 가부장제(welfare state patriarchy)로 전환된 국가들(특히 북구형 국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격자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여성 및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의존이 남성이 아닌 국가로 바뀌게 되면서, 이들의 국가 복지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국가의 복지지출 규모는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김경희·김혜장, 1997). 요약하면 격차가 높다는 것은 사적 가부장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격차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지출이 적어진다. 다만, 격차 성향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복지지출 중 현물급여보다 현금급여 비중이 높다. 반면, 공적 가부장제가 높아지면(즉, 격차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은 늘어나지만 복지지출 중 현물급여(사회복지서비스)의 상대적 비중이 높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통해서 격차의 정도는 복지정책(현금이전지출)을 매개로 소득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앞서서도 논의했듯이 현금이전지출규모와 소득불평등도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복지급여는 크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누어지는데, 두 급여 형태 모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 다만 현물급여는 현금이 아닌 물건이나 서비스 등의 형태로써 빈곤층을 포함하는 정책대상에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가구소득을 기반으로 한 가구 가치분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 만약 소비행태를 반영한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한다면 현물급여는 소득불평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에 현금급여는 종속변수인 가구 가치분소득불평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금이전급여에는 실업수당·장애수당·상병급여와 같이 개인의 불행 등의 위험에 대비한 소득보전의 형태, 노령연금·가족수당과 같이 생애주기와 관련된 소득 재분배 형태, 그리고 자산조사를 통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부조 형태가 있다.⁹⁾ 또한 소득불평등도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정부정책으로는 조세와 현금이전이 가장 대표적인데, 앞서서도 논의했듯이 현금이전정책이 조세정책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면 문화적 특성은 직접적으로 소득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간접적으로 현금 이전지출 규모라는 복지정책을 통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 효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1: 현금이전지출규모가 클수록(낮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진다(높아진다).

가설 2: 집단 성향이 강해질수록 소득불평등도는 낮아진다.

가설 3: 집단 성향이 강할수록 현금 이전지출 규모가 증가한다.

가설 4: 격차 성향이 강해질수록 소득불평등도는 높아진다.

가설 5: 격차 성향이 강할수록 현금 이전지출 규모가 증가한다.

9) 노령연금은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보전의 기능을 하지만 대부분 국가의 연금설계는 소득재분배적 특성을 지닌다. 즉, 노령연금은 고소득자가 저소득자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하고 덜 수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에 대한 논의는 일단 산업화 논리로 설명 가능하다. Kerr 등(1964)에 의하면 경제성장과 복지지출 규모는 ‘+’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 논리의 당위성은 경제성장은 복지재정 확보에 기여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격차에 의한 사회적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복지지출 규모를 늘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많은 경험연구들에서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들은 이와 반대로 경제 불황이 오히려 복지지출 규모를 확대시킨다는 논리와 경험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Brooks & Manza, 2007; Barr, 2012; 신현중, 2013). 이들은 경제 불황이 높은 실업률로 인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노력과 심각한 빈곤문제 대두를 가져와서 복지비용 증대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사회 관련성 가설(social affinity hypothesis)에 따르면,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사회적인 소득 상승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이는 빈곤층에 대한 동정심 약화로 이어진다(Schwabish et al., 2004: 9).¹⁰ 따라서 경제성장과 복지지출 규모(특히 여기에서는 현금이전지출규모)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병존하며,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또는 경제불황)이 현금 이전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고찰한다.

한편, Schwabish et al.(2004: 10)에 의하면 평균소득 증가와 소득재분배와의 관계는 복지지출이라는 의미에서 형성되는데, 평균소득 증가율이 높을수록 공공지출의 비율이 증가한다. 즉, 이들의 논리를 적용하면 경제성장은 소득불평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지출 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Schwabish et al.(2004)의 주장과는 달리 두 변수들 간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는데, 이들도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급측면 경제학의 입장은 경제성장이 고용증대와 실질소득 증가(‘낙수효과’)를 통해서 소득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노동시장이론은 경제성장 시기에는 기업들이 양질의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져서 상대적으로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근로자들도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Okun, 1973). 또한 경제성장의 장기화에 따른 기술 수준 향상으로 인해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증가하면, 이들의 임금이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Cutler & Katz, 1991).

그러나 경제성장이 언제나 소득불평등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소득불평등

10) de Mello & Tiongson(2003: 3)이 지적하듯이 경제성장이 지속적인 경우 빈곤은 감소하지만 소득분배 향상에는 필요조건이 아니며, 특히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포된 국가에서는 더 그러하다.

을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는데, 자본 집중적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대 경제의 맥락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은 주로 자본 측이 가져간다고 한다. 또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이 커지면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Cutler & Kztz, 1991; 김태성·성경룡, 2014: 370-374).¹¹⁾

이와 같이 경제적 요인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쟁이 있어왔다. 따라서 경제적 요인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은 양측 검증을 통해 관찰하는데, 직접적 효과에 대한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가설 6: 경제성장은 소득불평등도 차이를 가져온다.

가설 7: 경제성장은 현금 이전지출 규모 차이를 유발한다.

3) 정치적 요인

복지정책 관련 문헌에서 복지국가(또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들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변수는 정부 이념(또는 정부 이데올로기)이다. 좌파 정부는 일반적으로 우파 정부에 비해 복지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파 정부에 비해 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도를 상대적으로 더 낮추려 노력한다. 그러나 좌파 정부 자체가 소득불평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다양한 조세 및 복지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 개선과 같은 정책목표를 추진한다. 즉, 좌파적 성향의 정부는 우파 성향의 정부보다 현금이전이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소득불평등도를 낮추려고 시도할 것이다.

한편, 집단성의 크기와 정부이념 간에는 일정 부분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강한 집단 속성은 연대주의적 성향을 길게 띠고 있으며 좌파 정당 역시 우파 정당에 비해 연대주의적 속성이 강하기 때문이다(George & Wilding, 1994). 따라서 집단 성향이 강한 국가에서는 좌파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즉, 집단이라는 문화적 속성이 좌파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을 더 높이고 이를 통해 현금 이전지출 규모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집단성향, 정부이념 및 현금 이전지출 규모간의 직접적 효과에 대

11) 원인-결과변수가 뒤바뀐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Kuznets(1955) 이래로 많은 경험연구들이 존재한다. 두 변수 간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Barr, 2012).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이 경제발전엔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자제한다. 다만 이에 대한 경험연구들의 구체적인 논쟁은 Peterson & Schoof(2015)를 참조하시오.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¹²⁾

가설 8: 좌파 정부는 우파 정부에 비해 현금 이전지출 규모를 더 늘린다.

가설 9: 집단 성향이 강할수록 좌파 성향의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4) 인구학적 요인: 노령층 증가

대부분의 복지관련 문헌에 의하면 노령층의 상대적 크기는 복지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소득불평등과 관련해서 이 변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지닌 양면적인 특성을 지닌다. 전자는 노령층의 증가가 복지지출 규모를 증가시킨다는 많은 경험연구들의 결과에 기반한다. 특히, 선진국에서 노령인구의 증가는 노령연금지출 규모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데, 노령연금은 거의 대부분 현금 이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논리에 의하면 노령층의 증가는 현금 이전지출 규모 증가를 가져오고 이것이 소득불평등 감소에 이바지한다.

또한, 노령층은 경제성장률을 매개로 해서 현금 이전지출 규모 및 소득불평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 노령층의 상대적 증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현금 이전지출 규모를 늘릴 것이다. 즉, 노령층의 증가는 직·간접적으로 현금 이전지출 규모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소득불평등도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노령층의 증가는 소득불평등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노령층의 주 소득원이 연금이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특히 생산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령층의 증가는 현금 이전지출 규모를 더 늘려서 소득불평등 감소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즉, ‘노령층 → 소득불평등’의 직접적 효과와 ‘노령층 → 현금이전지출규모 → 소득불평등도’ 및 ‘노령층 → 경제성장 → (현금이전지출규모) → 소득불평등도’의 간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노령층의 직접적 영향과 관련된 가설들이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12) 정부이념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좌파정부는 완전고용정책을 추구하고 우파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전후로 장기적 경제 불황이 도래하면서 좌/우파 정부의 정책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이 통설이 되었다. 두 변수의 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가설은 설정하지 않는다.

- 가설 10: 노령층의 증가에 따라 소득불평등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가설 11: 노령층의 증가는 현금 이전지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
 가설 12: 노령층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범위(사례선정) 및 분석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19개 OECD 국가들의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¹³⁾ 본 연구에서는 문화가 정태적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다는 시각에서 약 10년의 격차를 두고 집단과 격자라는 문화적 특성을 관찰하였으며, 분석모형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도 이에 따랐다.¹⁴⁾ 따라서 분석 시기는 3개이며 각각 1990~1992년, 1999~2001년 및 2008~2012년이다. 다만 뉴질랜드, 스위스와 호주는 1차시기를, 덴마크와 포르투갈은 2차시기를 분석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이들 국가에서 해당 시기에 집단과 격자의 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례 수가 52개에 불과해서 경로모형으로 분석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으나 최소한의 사례 수는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¹⁵⁾

13) 분석 대상 국가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미국, 벨기에,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캐나다, 호주이다.

14) 그러나 실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있어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문화(집단/격자) 및 소득불평등 자료는 3개 시기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N	평균	표준오차	분산분석결과	
					F값	유의확률
집단	1990	15	.4593	.08310	.047	.954
	1999	18	.4961	.07733		
	2008	19	.4789	.08464		
	합계	52	.4792	.04653		
격자	1990	15	.4960	.09799	.012	.988
	1999	18	.5000	.08293		
	2008	19	.4826	.08083		
	합계	52	.4925	.04897		
소득불평등	1990	15	28.1055	1.12458	.628	.538
	1999	18	28.9038	1.02571		
	2008	19	29.7409	.92598		
	합계	52	28.9794	.58363		

15) Stone & Sobel(1990)은 몬테카를로 검증방법으로 6개 이상의 변수를 사용한 순차경로모형에서 간접효과와 효율적인 추정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 모두를 추진한다. 양적 방법으로는 경로분석 모형을 사용하며 질적 방법으로는 Mahoney의 필요/충분조건에 의한 인과관계 분석 방법을 시도한다.

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규명할 때 이론적 논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변수들 간의 시차관계이다. 원인변수가 결과변수보다 항상 앞서기는 하지만 시차가 매우 짧은 경우도 있다. 즉, 본 연구에서처럼 연 단위의 자료를 사용하면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간 시차가 1년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1년 이상이거나 또는 누적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들은 연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나 시계열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또는 누적된 형태의 시차를 적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집단과 격자와 같은 문화적 특성이 t시점에서 관찰될 때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t시점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t+s시점부터 시작될 수도 있으며, 또는 특정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다른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적절한 시차구조의 형성은 변수들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추적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시계열자료 분석이 아닌 경우에는 적절한 시차구조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데 본 연구의 분석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 차원에서의 인과관계만을 관찰하는데, 이때 최대 1년의 시차구조를 설정한다. 즉, 현금 이전지출 규모 및 소득불평등도는 t+1시점으로 측정하며 나머지 변수들은 t시점에서 측정한다. 이는 현금 이전지출 규모는 전년도의 다양한 상황에 근거한 예산확보를 통해 당해 예산집행을 통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소득불평등도는 당해 연도의 현금 이전지출 규모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¹⁶⁾

2. 변수 측정

소득불평등도는 세후 및 현금이전 이후의 가구 소득불평등도(가구 가치분소득불평등도)

값 및 표준오차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개 이상의 사례 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추가적 분석을 통해 사례 수가 50개인 경우에도 3,500개의 95% 신뢰구간에서 거의 95%가 모수를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신현중, 2002: 161-162 재인용). 한편, 본 연구에서는 7개의 변수로 구성된 분석모형과 52개의 사례 수를 지녔기 때문에 효율적인 간접효과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례 수는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관찰할 때는 조심스럽게 관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6) 분석 자료는 약 10년 주기로 측정되는 데, 집단과 격자는 2~3년의 연속자료의 평균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다른 변수들도 이러한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는데, 현금지출규모와 소득불평등도는 1년 시차구조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특정 시기의 집단 크기가 $[(t-1)+t]/2$ 로 측정되면, 현금 이전지출 규모는 $[t+(t+1)]/2$ 로 측정된다.

로 측정하며, 현금 이전지출 규모는 GNI 대비 현금 이전지출 비율로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특정 복지지출비로 측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득관련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총소득을 의미하는 GNI를 사용한다. 한편, 가구 가처분소득불평등도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조세제도 효과도 분석모형에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조세제도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경험연구에서 변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금이전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세전 및 현금이전 이후의 소득불평등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해야 하지만, 이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OECD 등의 자료는 2000년 중반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후 및 현금이전 이후의 소득불평등도’인 가구 가처분소득불평등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집단과 격자는 EVS(European Value Survey)와 WVS(World Value Survey) 자료 중에서 집단과 격자에 해당하는 문항들로 구성되며, 주성분 요인분석을 통해 집단 2개와 격자 1개를 창출하였다.¹⁷⁾ 경제성장 정도는 실질경제성장률로 나타내며, 정부의 이념적 특성은 ‘내각에서 차지하는 우파 정당 각료 비율-좌파 정당 각료 비율’로 측정하고, 노령인구는 ‘생산능력이 있는 인구층(15~64세) 대비 노령층의 인구 비율’로 측정한다. <표 1>은 변수의 조작화를 통한 측정변수의 특성을 나타낸 요약표이다.

<표 1> 측정변수의 특성

구성개념		측정도구
현금이전 규모		현금이전지출비/GNI×100
소득불평등도		가구 가처분소득불평등도
문화적 특성	집단*	1. 소속감: 4개 항목으로 구성 2. 집단경계: 3개 항목으로 구성 6개 항목으로 구성
	격자*	
경제성장률		실질경제성장률
정부이념		내각 내 우파 정당 각료 비율-좌파 정당 각료 비율
노령층 규모		(노령층/15~64세 인구층)×100

* 필요충분 조건 분석에 있어서 퍼지점수로 계산: Fs/QCA 2.0 프로그램(Ragin, Drass & Davey, 2006)을 이용하여 완전소속은 0.95, 완전비소속은 0.05, 분기점은 중위수를 기준으로 적용함.

17) 집단은 ‘소속감’과 ‘집단경계’의 두 잠재변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자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을 이웃으로 하는 것에 대한 수용 여부’,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여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 덕목 중 책임감과 근면에 대한 찬성 여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자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 덕목 중 종교적 신념에 대한 찬성 여부’, ‘동성애의 정당성 여부’ 및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하는 것에 대한 수용 여부’ 등 3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격자는 ‘규율’이라는 잠재변수로 나타나는데, ‘마약중독자를 이웃으로 하는 것에 대한 혐오 여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 여부’,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양 부모가 다 필요한지 여부’, ‘여성의 자녀 출산 의무 여부’, ‘정치적 행위로서 탄원서 서명 경험 여부’와 ‘정치적 행위로서 보이콧 참여 여부’ 등 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의 변수 정리과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주재현 외(2016)를 참조하시오.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경로모형 분석결과 및 해석

앞에서 세운 가설들은 LISREL 9.2를 이용하여 경로모형으로 분석했는데, 간명화된 최종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분석모형에서 사례 수가 52개에 불과해서 상대적 적합도 지수, 특히 CFI(Comparative Fix Index) 등을 중심으로 모형의 간명화를 추구하였다. 최종모형에서 CFI지수는 0.980이었고, 상대적 적합도 및 간결성 적합도 지수인 NNFI(non-normed fit index)는 0.948이다. 심준섭(2013)에 의하면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다른 적합도 지수들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도 NNFI값이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본 연구 결과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⁸⁾

1) 문화변수의 영향효과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문화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력에 대한 검증 결과(<그림 1>과 <표 2>), 문화(집단/격자)는 소득불평등에 대하여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영향력이 모두 유의미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문화 특성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일치한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논의되지 못하였던 직접적 영향력과 간접적 영향력간의 비교 결과, 문화의 직접적 영향력이 간접적 영향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과 격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 양태가 사뭇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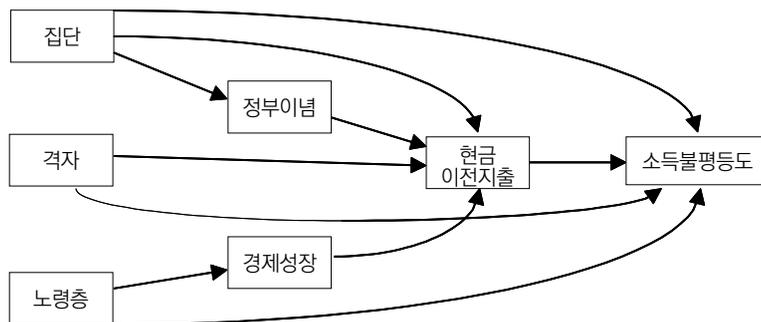
먼저, 집단의 경우 소득불평등에 대한 직접적 효과 및 간접적 효과 모두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와 3). 특히 집단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직접효과는 간접효과를 포함하여 모형에 있는 모든 변수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가 간접효과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집단 성향이 큰 국가일수록, 현금이전지출 정책이 높지 않더라도 사회 연대성에 의한 소득불평등 감소의 효과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집단이 높은 국가에서 현금지출을 높이는 경우 상

18) 또한, <표 2>에서 보듯이 정부이념의 역할은 0.1 유의수준의 단측 검증결과를 최종모형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가 약간 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0.1 유의수준의 단측 검증결과를 포함한 이유는 비록 이 결과가 0.05 유의수준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나 사례 수가 많으면 충분히 유의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정부이념 변수를 제외할 경우에는 적합도가 매우 높아져서 CFI 및 NNFI가 거의 1.000에 접근한다. 다만, 정부이념이라는 변수가 일반적으로 이론적 논의에서 복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가 약간 떨어지지만 이를 최종모형에 포함하였다.

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소득불평등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사실이다.

반면, 격자와 관련된 가설 4와 5는 모두 0.05 유의수준의 단측 검증에서 받아들인다. 즉, 격자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직접적 효과는 정(+)의 관계, 즉 격자가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 역시 높아지지만, 격자가 현금이전지출을 통한 간접적 효과로 나타날 때에는 부(-)의 효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격자의 총효과를 보면 소득불평등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격자적 성향이 큰 국가일수록 현금지출규모가 크고 이것이 소득불평등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격자 그 자체가 소득불평등도를 높이는 직접 효과를 뺀으로써 긍정적인 간접 효과와 부정적인 직접 효과가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다.¹⁹⁾ 예를 들어, 분석 사례에 포함된 남유럽국가들의 경우 집단 성향은 약하지만 격자는 매우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시장소득불평등도도 높지만 가처분소득불평등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 즉, 이들 국가들은 현금이전과 같은 복지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시도해도 그 사회가 지니는 한계로 인해 이러한 정책들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아무튼 이 분석결과는 격자가 큰 문화를 가지는 국가일지라도 현금이전지출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소득불평등을 상당히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림 1〉 간명화된 최적 경로모형



19) 이와 같은 상충현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2〉 표준화계수로 표현한 경로모형의 분석결과: 직·간접 및 총효과

	정부이념	경제성장	현금이전지출		소득불평등도		총효과
	직접	직접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집단	-1.734**		0.234**	0.234	-0.755**	-0.171**	-0.925**
Sq집단	1.612**			-0.217		0.079	0.079
격자			0.447**		0.188**	-0.163**	0.025
노령층		-0.360**		0.126**	0.214**	-0.046**	0.168**
정부이념			-0.135*			0.049*	0.049*
경제성장			-0.349‡			0.127‡	0.127‡
현금이전지출					-0.365**		-0.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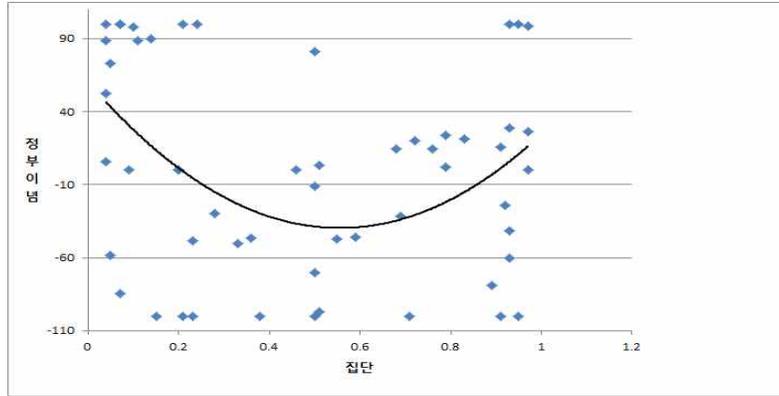
*: $p \leq 0.1$ (단측 검정); **: $p \leq 0.05$ (단측 검정); †: $p \leq 0.05$ (양측 검정)

집단 성향과 정부이념에 대한 〈가설 9〉에서는 집단 성향이 큰 국가에서 좌파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두 변수들 간 관계는 선형이 아닌 U자형의 관계를 띠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정부이념 = $-1.734 * \text{집단} + 1.612 * \text{집단}^2$]의 2차방정식의 추정계수 모형이다.

이 추정식에서 꼭지점의 값은 0.538이며 이에 근사한 값을 지닌 국가는 프랑스가 해당된다. 즉, 집단의 크기가 작은 국가들(대부분 영미권 및 남유럽국가들)은 집단크기가 클수록 좌파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많으나, 집단크기가 0.538보다 큰 국가에서는 오히려 평균적으로 우파적 성향이 강한 국가들이 들어서는 경향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그림의 우측 상단의 세 점은 이상점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덴마크의 1, 3차기 및 네덜란드의 1차기로서 이 시기에는 이들 국가에서 우파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을 제외한 경우에는 선형의 형태를 띠면서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좌파적 성향의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곡선 우측의 하단부에는 스웨덴, 독일 및 핀란드가 위치해 있으며, 곡선 우측 부분의 바로 위에는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대륙형 복지국가들이 점하고 있다.²⁰⁾

20) 두 변수 간 관계는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시점에서 더 고찰할 여지가 있다.

〈그림 2〉 집단성의 정부이념에 대한 영향력



2) 문화요인 외 요인들의 영향효과

첫째,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가설은 2개인데, 이 중에서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6〉은 0.05 유의수준의 양측 검증에서 기각된다. 이는 두 변수들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공급측면 경제학자들을 포함한 일련의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성장은 현금 이전지출 규모라는 복지정책 도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득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Schwabish et al.(2004)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과이다.

한편, 경제성장과 현금이전지출규모는 ‘-’ 관계를 띠는데, 이는 산업화 논리가 잘 적용되지 않으며, 사회 관련성 가설(social affinity hypothesis) 및 경제 불황이 오히려 복지지출규모를 늘린다는 연구들(Brooks & Manza, 2007; Barr, 2012; 신현중, 2013)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정부이념은 이론적 논의에서 밝혔듯이 현금 이전정책을 매개로 소득불평등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즉, 좌파적 성향이 강한 정부일수록 현금 이전지출 규모를 늘려서 평등사회를 이루려고 노력한다.²¹⁾ 그러나 정부이념과 관련된 직접적 및 간접적 효과 모두 0.1 유의수준의 단측 검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을 뿐이다. 즉, 다른 변수들에 비해 통계적 파워(statistical power)가 낮은 수준이다.²²⁾ 본 모형에서 정부이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총효

21) 〈표 2〉에서 정부이념과 현금이전지출규모 및 소득불평등의 관계는 각각 ‘-’, ‘+’로 나타나 있다. 이는 정부이념이 우파 정부는 ‘+’값을 띠고 좌파정부는 ‘-’값을 띠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다른 변수들에 대한 것과는 반대의 해석이 필요하다.

22) 이는 본 연구의 사례 수가 작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으며, 차후 사례 수가 많은 모형에서 재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과는 격자를 제외하고 가장 작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²³⁾

셋째, 노령층과 관련된 가설들은 3개(가설 10-12)인데 이 중에서 <가설 11>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의 가설은 받아들인다. 즉, 노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령층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심화시킨다(<가설 10>). 또한, 노령층의 증가는 경제성장률의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가설 12>), 현금 이 전지출 규모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1>). 본 연구의 연구대상 국가들은 선진국들로서 노령연금이 성숙된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노령 연금은 현물이전보다는 현금이전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노령층의 증가는 현금 이전지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⁴⁾

요약하면, 현금 이전정책과 같은 정책도구가 소득불평등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국가 간 소득불평등도 차이는 특정 국가의 문화적 특성, 특히 집단적 성향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집단적 특성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직접적 영향 뿐 아니라 현금 이전지출 규모 및 특정 성격의 정부 등장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도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에 반해 격자 특성은 현금 이전지출 규모 증가를 통한 소득불평등 감소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소득불평등에는 직접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격자적 특성은 두 효과의 상쇄작용에 의해 소득불평등에 미미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2.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문화의 영향력: 필요/충분조건 분석

1) 필요/충분조건 분석 개요

소득불평등에 대한 문화의 영향력에 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앞의 경로모형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통계분석에서 나타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은 평균적인 의미에서의 영향력이다. 즉 분석에 이용되는 개별 사례들의 특이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개

23) 이러한 결과는 집단과 정부이념과의 관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24) 사실 두 변수의 단순상관관계는 0.494여서 노령층의 증가와 현금 이전지출 규모는 중간 정도의 공분산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변수들을 격자와 경제성장률이라는 두 변수로 통제된 상황에서의 편상관계수는 0.251이며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따라서 현금 이전지출 규모를 종속변수로 하는 수식모형에서 이 두 변수와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노령층이 현금 이전지출 규모에 미치는 순수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이 밝혀졌다.

별 사례들의 평균적 영향력이 통계적으로(선형적으로) 유의미한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서구 19개 국가들은 Esping-Andersen으로 대표되는 많은 기존 연구들에서 서로 상이한 성격을 가지는 유형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인과관계가 복지국가 유형별 맥락에 따라 질적인 인과관계인 필요/충분조건 관계의 측면에 있어 유형별 차별성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 국가유형별 차이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지를 해석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한다. 필요/충분조건 관계 분석은 Mahoney et. al(2014: 25-31)이 제시한 퍼지셋 소속관계에 따른 분석을 이용한다.

먼저 필요조건은 특정 결과(Y)가 발생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전제조건(X)을 의미한다. 필요조건을 변수 간 포함관계로 표현하면 특정 결과(종속변수)가 전제조건(독립변수)에 포함되는 관계인 경우이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X \supset Y$ 이다. 충분조건은 전제 조건 자체(X)만으로도 특정 결과(Y)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하며, 이를 변수 간 포함관계로 나타내면, 특정결과(종속변수)에 전제조건(독립변수)이 포함되는 관계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X \subset Y$ 이다²⁵⁾.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포함관계 분석을 위하여 19개 국가의 변수별 퍼지셋 소속점수를 계산하고, 2차원 평면상(x축은 전제조건, y축은 특정결과)에 있어 대각선 위쪽에 위치할 경우 충분조건(y가 x보다 크기 때문에 $X \subset Y$ 인 포함관계임), 아래쪽에 위치할 경우에는 필요조건(x가 y보다 크기 때문에 포함, $X \supset Y$ 인 포함관계임)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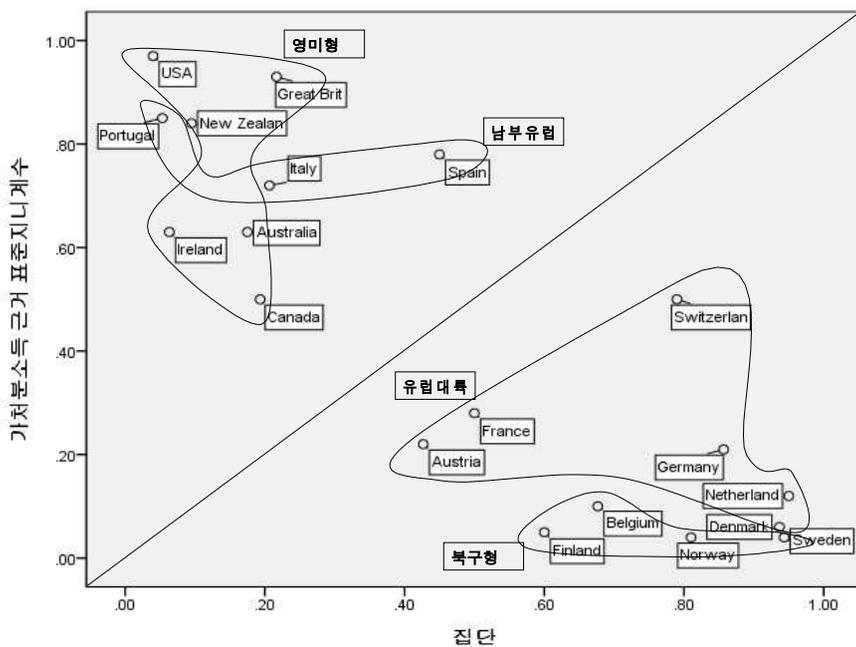
2) 분석 결과

위의 경로모형 분석결과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영향에 있어 문화변수(특히 집단)의 직접적 영향력이 현금 이전지출(복지정책)을 통한 간접적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모형에서 검증된 서구 19개 국가들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문화변수의 평균적 영향력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Esping-Andersen이 제시한 복지국가 유형별로 과연 영향력의 형태가 동일한지 또는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필요/충분조건 분석을 통하여 비교분석한다.

25) 충분조건을 '돼지는 동물이다'이라는 명제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돼지는 많은 동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즉 돼지는 동물에 포함되는 관계) 이 명제는 참이면서 돼지는 동물이 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돼지→동물'은 충분조건). 반면 위의 명제에 있어 동물 대신 식물을 넣는다면(돼지는 식물이다), 이 명제는 참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동물은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동물→돼지'는 필요조건이며, 여기서는 동물에 돼지가 포함되는 관계).

먼저 문화변수 중 집단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복지국가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²⁶⁾. 그림의 대각선을 중심으로 영미형 국가와 남부유럽형 국가들은 좌상에 위치하고 있다(집단C소득불평등).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집단이 소득재분배에 대한 충분조건이라는 점이고, 높은 집단 특성이 갖춰지면 소득재분배가 나타나지만 그 설명범위는 제한된다는 것이다.

〈그림 3〉 복지국가 유형별 소득불평등에 대한 집단 특성의 영향력



그런데 이 국가들은 집단 특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공통점을 지닌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주재현 외, 2016). 즉 집단 특성(국가적 연대감과 공동체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높은 집단 특성이 갖춰져 있지 않은) 영미형 및 남부유럽형 국가들의 경우에는 높은 소득재분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는 소득불평등 정도에 대한 집단 특성의 설

26) 〈그림 3〉과 〈그림 4〉의 분석결과를 보면, 변수자체(문화→소득불평등) 간 필요/충분조건은 명백히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복지국가 유형별로 묶어서 보았을 때, 일정한 패턴이 나타남에 착안하여 해석을 시도한다. 이에 따라 본 분석결과와 해석은 일반화될 수 있는 수준이라기보다 복지국가 유형별 문화의 소득불평등정도에 대한 패턴을 찾아내는 탐색적 수준으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을 밝힌다.

명력이 제한됨을 의미한다.

한편, 북구형 국가와 유럽대륙형 국가들은 집단이 소득재분배에 대한 필요조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대각선을 중심으로 우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관계로 나타내면 ‘집단소득불평등’이다. 즉 북구형 및 유럽대륙형 국가들의 경우, 높은 집단 특성은 소득재분배가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이고, 달리 표현하면, 이들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 정도에 대한 집단 특성의 설명력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북구형 및 유럽대륙형 국가들이 높은 집단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주재현 외, 2016). 국가적 연대감과 공동체의식이 높은 이 국가들은 사회의 제 영역에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고, 이것이 소득재분배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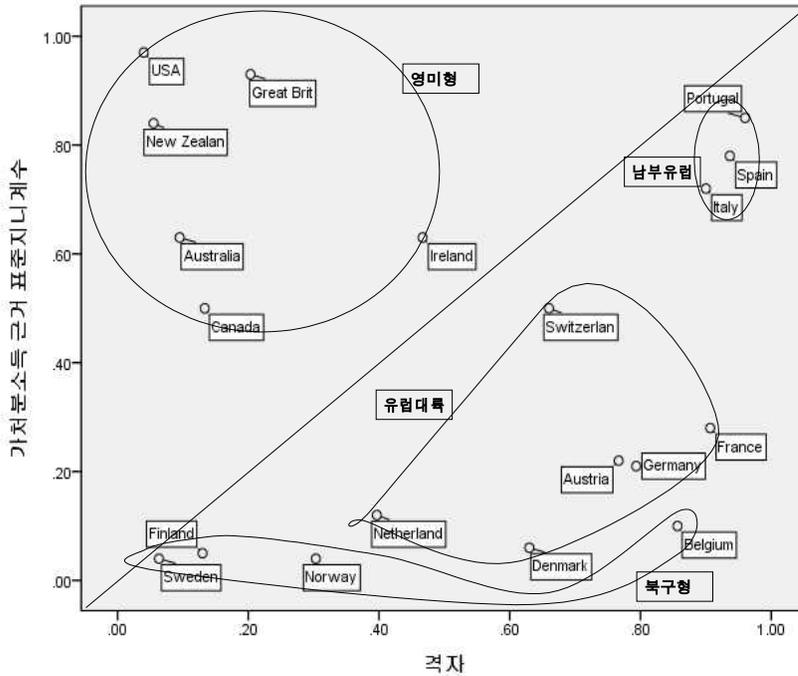
다음으로, 격자의 경우 영미형 국가만 격자가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충분조건으로 나타났고, 유럽대륙형·남부유럽형·북구형 국가들은 격자가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필요조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대륙형·남부유럽형·북구형 국가들에서는 높은 격자 특성(역할규정과 차등)이 소득불평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영미형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격자 특성의 영향력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대륙형과 남부유럽형 국가들은 격자 특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영미형 국가들은 격자 특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주재현 외, 2016),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이론적 기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격자 특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북구형 국가들에서(주재현 외, 2016) 격자가 소득재분배에 대한 필요조건으로 나타난 것은 이론적 기대와 부합하지 않는다. 북구형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격자 특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총고용보호지수의 경우에서 발견되듯,²⁸⁾ 이들 국가에서도 일부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격자가 나타나고 있다(주재현 외, 2016: 146-147). 이러한 현상을 고려해보면, 위의 분석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7) 이 국가들이 양적 분석에서 소득불평등 정도에 대한 집단 특성의 높은 영향력이라는 결과를 이끈 것으로 볼 수 있다.

28) 고용보호지수는 고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적 조치를 의미하며, 정규직과 임시직에 대한 법적 조항을 점수화한 것이다. 이 지수가 낮으면 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퇴출이 용이하게 되어 노동시장의 유연화 수준이 높은 반면, 이 지수가 높으면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유럽대륙형과 남부유럽형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구형 국가들에서도 고용보호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복지국가 유형별 소득불평등에 대한 격자 특성의 영향력



문화의 복지에 대한 영향력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영미형의 경우 집단, 격자 모두에 있어 충분조건이며, 유럽대륙형과 북구형은 집단, 격자 모두에 있어 필요조건으로 나타났고, 남부유럽형은 집단은 충분조건, 격자는 필요조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같은 유럽국가일지라도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문화의 필요/충분조건 측면에서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국가에 있어 문화변수의 복지에 대한 전반적 영향력이 존재하지만,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문화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V. 결론

문화는 한 사회의 복지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한 사회의 거시적 맥락을 구성하는 문화변수가 '소득불평등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양적 및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인용하여 문화변수(집단 특성, 격자 특성)를 설

정하였으며, 양적 분석은 서구 19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소득불평등 정도에 대한 문화변수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지 또는 현금 이진지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화변수와 여타 설명변수(경제성장 정도, 정부 이념적 특성, 노령인구 비중)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질적 분석에서는 필요/충분조건 분석을 적용하여 소득불평등 정도에 문화변수가 복지국가 유형별(북구형, 유럽대륙형, 영미형, 남부유럽형)로 다른 패턴의 영향력을 가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양적 분석결과, 문화변수 중 집단 특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간접적 영향보다 직접적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즉 한 국가의 집단성향이 강해질수록 정부의 특정 복지정책과 상관없이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집단 성향이 강한 국가에서 복지정책(현금이전)을 실시할 경우 소득불평등을 낮추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격자 특성의 직접적 효과는 소득불평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격자가 현금이진지출정책을 통하여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득불평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격자 성향이 높은 국가의 경우, 강력한 복지정책이 없다면 격자 문화특성에 의해 소득불평등 정도가 상당히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질적 분석결과에서는 복지국가 유형별로 문화변수와 소득불평등 정도의 관계가 차이를 보였다.

먼저 집단 특성의 경우, 집단 성향이 낮은 국가들(영미형, 남부유럽형)의 경우 집단 성향이 낮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측면에서 충분조건인 반면, 반대의 경우인 유럽대륙형과 북구형 국가들의 경우 집단성향이 강할수록 소득불평등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집단이 소득불평등에 대한 필요조건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격자특성에 있어서 남부유럽형 국가들의 경우 격자특성의 필요조건의 의미가 격자가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필요조건인 반면, 북유럽 국가의 경우(벨기에만 제외) 격자특성이 낮아질수록 소득불평등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필요조건의 의미를 갖는다. 요컨대, 소득재분배에 대한 집단 특성의 설명력은 북구형과 유럽대륙형 국가들에서 특히 높았고, 격자 특성의 설명력은 영미형 국가들에서 매우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양적·질적 분석의 결과는 일부 이론적 예상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문화변수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확인해주었다. 특히 여타 설명변수들보다 문화변수(특히 집단 특성)의 설명력이 더 높다는 점과 여타 변수들을 통한 간접적 영향보다 문화변수의 직접적인 영향이 더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회복지에

대한 문화변수의 영향 패턴이 복지국가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며, 문화변수의 영향은 특히 북구형 국가와 유럽대륙형 국가에서 강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에 대한 문화의 설명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사회복지와 문화의 관련성에 대한 문헌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종합적으로 시도하여 보편적 명제의 제시 뿐 아니라 중범위적인 일반화를 모색하였다는 점,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적용하여 포괄적이면서도 역동적인 문화개념을 전제로 하였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기존 문헌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와 문화의 관련성 및 본 연구의 접근방법에 대한 검증과 보완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희·김혜장. (1997). “가부장적 국가,” <여성과 사회 8> 1997. 8. 창작과 비평사.
- 김태성·성경룡. (2014). <복지국가론>. 개정2판. 경기도: 나남출판.
- 박종민 편. (2002). <정책과 제도의 문화적 분석>. 서울: 박영사.
- 신현중. (2002). “순차경로모형(Recursive Path Model)을 사용할 경우의 유의 사항에 대한 논의,”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0권 제1호, 145-164.
- 신현중. (2013). “국민의 복지선호도와 정부 대응성의 순환적 인과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제22권 제3호, 201-233.
- 신현중. (2017). “선진 OECD국가들에서 개인 재분배선호도 결정요인의 시기별 변동성에 대한 분석: 개인의 문화적 정향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26권 제2호, 335-367.
- 조영훈. (2010). “복지국가 발달에 대한 문화주의적 해석과 그 평가: 미국과 캐나다의 복지수준 차이에 대한 립셋의 견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4권 제1호, 98-122.
- 주재현. (2004). “사회복지와 문화: 복지국가 유형론에 대한 문화이론적 해석,” <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제3호, 279-297.
- 주재현. (2011). “한국 행정문화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Grid-Group 문화이론의 적용,” <정부학연구> 제17권 제1호, 1-33.
- 주재현·신현중·박치성. (2016). “복지국가의 유형과 문화: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적용한 복지국가 유형론 정립,”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4호, 123-155.
- 홍승아. (1998).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5권, 453-474.
- Alesina, A. & Paola G. (2013). “Culture and Institution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19750.

- Barr, N. (2012). *Economics of the Welfare State*. 5th edition.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Bénabou, R. (2000). “Unequal Societies: Income Distribution and the Social Contract,” *American Economic Review*, 90(1): 96–129.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G.R. Joh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46–58. New York: Greenwood.
- Brooks, C. & Manza, J. (2007). *Why Welfare States Persist: The Importance of Public Opinion in Democracie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utler, D. & Katz, L. (1991).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the Disadvantaged,”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 1–74.
- de Mello, L. & Tiongson, E.R. (2003). *Income Inequality and Redistributive Government Spending*. IMF Working Pape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Dodd, A. (2013). *Comparative Public Polic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Douglas, M. (1982). “Cultural Bias,” in M. Douglas, *In The Active Voice*. London: Routledge.
- Douglas, M. & Wildavsky, A. (1982). *Risk and Culture: An Essay on the Selection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uch, Raymond M. & David Rueda. (2015). “The People You are: Personality Traits as Determinants of Redistribution Preferences,”
http://lore.gu.se/digitalAssets/1526/1526114_duch_rueda_2015_gothenburg.pdf
- Elkins, D. J. & Simeon, R. E. B. (1979). “A Cause in Search of Its Effect, or What Does Political Culture Explain?” *Comparative Politics*, 11(2): 127–145.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eorge, V. & Wilding, P. (1994). *Welfare and Ideology*. Hemel Hempstead, UK: Harvester Wheatsheaf.
- Grendstad, G. (1999). “A Political Cultural Map of Europe. A Survey Approach,” *GeoJournal*, 47: 463–475.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New York: McGraw-Hill.
- Jo, N. K. (2011). “Between the Cultural Foundations of Welfare and Welfare Attitudes: the Possibilities of an in-between Level Conception of Culture for the Cultural Analysis of

- Welfar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1(1): 5–19.
- Jones, C. (1993). “The Pacific Challenge: Confucian Welfare States,” in C. Jones (ed.). *New Perspectives on the Welfare State in Europe*. London: Routledge.
- Kahan, D., Braman, D., Gastil, J., Slovic, P. & Mertz, C. K. (2007). “Culture and Identity Protective Cognition: Explaining the White–male Effect in Risk Perception,”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4(3): 465–505.
- Kerr, C., Dunlop, J. T., Jarbison, F. H., & Meyers, C. A. (1964). *Industrialism and Industrial M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uznets, S. (1955).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45(1): 1–28.
- Le Clainche, C. & Wittwer, J. (2012).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Normative Rationality, Self-Interest and Social Identification*. Document de Recherche. Laboratoire Montpelliérain d’Economie Théorique et Appliquée(LAMETA). No. 2012–26.
- Leibfried, S. (1993). “Toward a European Welfare State?” in C. Jones (ed.). *New Perspectives on the Welfare State in Europe*. London: Routledge.
- Lipset, S. (1968). *Revolution and Counterrevolution: Change and Persistence in Social Structures*. New York: Basic Books.
- Lipset, S. (1990). *Continental Divide: The Values and Institu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London: Routledge.
- Lockhart, C. (2001). *Protecting the Elderly: How Cultures Shapes Social Policy*. University Park, P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Mahoney, J., Kimball, E., & Koivu, K. (2009). “The Logic of Historical Explanation in the Social Scienc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2(1): 114–146.
- Mahoney, J. & Vanderpoel, R. S. (2014). “Set Diagrams and Qualitative Research,”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8(1): 65–100.
- Okun, A. (1975). *Equality and Efficiency: The Big Trade-off*. Brookings Institution Press; 이영선 옮김. (1993). <평등과 효율: 갈등구조의 분석 및 조화의 방안>. 서울: 현상과 인식.
- Peterson, T. & Schoof, U. (2015). “The Impact of Income Inequality on Economic Growth,” *Future Social Market Economy*.
http://www.bertelsmann-stiftung.de/fileadmin/files/BSt/Publikationen/GrauePublikationen/Impulse__2015-05_income_inequality_and_growth.pdf
- Pfau-Effinger, B. (2005). “Culture and Welfare State Policies: Reflections on a Complex

- Interrelation,” *Journal of Social Policy*, 34(1): 3–20.
- Pfau-Effinger, B. (2008). “Cultural Change and Path Departure: the Example of Family Policies in Conservative Welfare States,” in van Oorschot, W., Opielka, M. & Pfau-Effinger, B. (eds.). *Culture and Welfare State: Values and Social Policy in Comparative Perspective*. Cheltenham, UK: Edward Elgar.
- Ragain, C. Drass, K. A. & Davey, S. (2006). *Fuzzy-Set/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2.0*. www.fsqa.com
- Rifkin, J. (2010). *The Empathic Civilization: The Race to Global Consciousness in a World in Crisis*. TarcherPerigee.
- Rueda, D. (2014). *Food Comes First, Then Morals: Redistribution Preferences, Altruism and Group Heterogeneity in Western Europe*. No. 200. Centre for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lobal Economy. Department of Economics. The University of Warwick.
- Schröder, M. (2013). *Integrating Varieties of Capitalism and Welfare State Research: A Unified Typology of Capitalisms*. Hampshire, UK: Palgrave Macmillan.
- Schwabish, J., Smeeding, T. and Osberg, L. (2004). “Income Distribution and Social Expenditures: A Crossnational Perspective,”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454.8002&rep=rep1&type=pdf>.
- Schwarz, M. & Thompson, M. (1990). *Divided We Stand*. Hemp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 Thompson, M., Ellis, R., & Wildavsky, A. (1990). *Cultural Theory*. Boulder, S.F.: Westview Press.
- van Oorschot, W. (2007). “Culture and Social Policy: a Developing Field of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6(2): 129–139.
- van Oorschot, W., Opielka, M. & Pfau-Effinger, B. (eds.) (2008). *Culture and Welfare State: Values and Social Policy in Comparative Perspective*. Cheltenham, UK: Edward Elgar.

주 재 현: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Policy Dynamics in South Korea: State Responses to Low Wage Levels and Compensation for Pollutions Victims, 1961-1988; 1997), 현재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정책·관료제통제·정책변동 등이며, 최근의 주요 논문으로 “삶의 양식’과 공무원의 책임성 갈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2017),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삶의 양식(Ways of Life)’에 관한 연구”(2017), “복지국가의 유형과 문화: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적용한 복지국가 유형론 정립”(2016), “공무원 책임성 딜레마 인지와 대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2015) 등이 있다(jhjoo61@mju.ac.kr).

신 현 중: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The Growth Patterns of Public Pension Expenditures of Sixtee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in the Period of 1961-1984: Pooled Cross-sectional and Time Series Analysis, 1995), 현재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정책, 계량행정 및 비교정치경제학이다. 최근의 주요 논문으로 “선진 OECD 국가들에서 개인 재분배선호도 결정요인의 시기별 변동성에 대한 분석: 개인의 문화적 정향성을 중심으로”(2017), “소득재분배 선호도 결정요인들의 시기별 영향력의 변동성에 대한 분석: 1990-2010년 기간을 중심으로”(2016), “동유럽 5개국의 복지국가 특성의 동질성과 다양성: 문화 및 정치체제의 특성을 중심으로”(2016), “복지국가의 유형과 문화: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적용한 복지국가 유형론 정립”(2016) 등이 있다(phjshin@gmail.com).

박 치 성: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행정학/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Collaboration among Human Service Nonprofit Organizations: Mapping Formal and Informal Networks of Exchange, 2006), 현재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이론, 네트워크 분석 등이다. 최근의 주요 논문으로 “Distorted policy transfer? South Korea’s adaptation of UK social enterprise policy”(2016), “Is ‘legitimized’ policy always successful?: Policy legitimacy and cultural policy in Korea”(2015), “The Importance of Feedback: Policy Transfer, Translation and the Role of Communication”(2014), “복지국가의 유형과 문화: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적용한 복지국가 유형론 정립”(2016) 등이 있다(csp7111@gmail.com).

논문투고일: 2017.8.17 / 수정일: 2017.9.20 / 게재확정일: 2017.9.28